

다산포럼



김진균
성균관대 초빙교수

작년에 사지 않은 금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10년 전에 사놓지 않은 집 때문에 더 막막해졌다고 느끼는 사람 많을 것이다. 자산 가치 폭등이라는 재앙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본화하는 금융상품이 ETF이다. 펀드이라도 조금씩 투자하면 자산 이익을 그만 큼 조금이라도 나눠가질 수 있는 세계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자산 가치 상승으로 더욱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털어, 손에 쥐여보지도 못할 자산 가치 상승의 거품통에 쏟아붓게 만드는 금융상품인 것이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비정규교수들이 강의료가 들어오지 않는 보릿고개 같은 겨울방학을 마치는 이 무렵, 매년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지원 공고를 낸다. 날로 가난해지는 삶의 바닥에서 자산시장을 올려다보는 시민들처럼, 비정규교수도 연구 중산층이 되고 싶은 실낱같은 기대를 품고 지원 공고를 들여다보게 되는 계절인 것이다. 비정규교수들도 연구재단 연구계획서를 쓰는 일이 자신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연구재단 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 빈민의 처지를 벗어나려면 연구 계획서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연구계획서는 실적, 계획, 의의 등을 나누어 서술하

연구재단을 폐지하라

도록 체계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다. 평가지표도 체계성, 기여도, 경제성 등의 지표들이 각진 틀에 얹혀 제공된다. 심사를 통해 높거나 낮거나 서로 다른 방향의 다양한 동기들을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줄세우고, 길거나 짧거나 서로 다른 길이의 다양한 결과들을 수월성이라는 가치로 잘라내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심사를 염두에 두고 효율성과 수월성 논리를 장악하고 나면 연구 계획서는 학계의 평균적 범위를 유지하되 약간의 유행 담론을 섞는 정도의 전형적 방법으로 수렴된다.

그만 그만하게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계획서들은 이제 자기 착취를 얼마나 더 계량화된 수치로 잘 제시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경쟁하게 된다. 여기에 공동체에 대한 지식인의 책무나 질문의 모험 같은 것들을 담기는 쉽지 않다.

과거 구조조정으로 IMF를 극복하던 시절 학술진흥 재단을 통해 만들어진 ‘학진 체제’는 논문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학계를 몰아넣었다. 학계가 20여년 계량 평가에 적응한 결과가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자기착취형 연구계획서인 것이다. 피로사회

의 일부인 대학이 피로학계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대다수의 연구계획서를 관통하고 있는 효율성과 수월성 그리고 계량화는 화폐라는 단일 가치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 기재부의 논리가 교육부의 예산을 쥐고 혼돈 결과이기도 하다. 당초 연구 공동체나 학문 생태계 혹은 학술의 사회적 책임 따위는 전혀 평가할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 기재부가 예산 통제권을 무기로 학계가 사회나 동료를 생각할 여유를 박탈한 것이니, 교육부가 기재부의 예산 통제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정적 결과의 하나가 연구재단 시스템

인 것이다.

연구계획서는 연구자가 이러한 연구재단 시스템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 재단을 좌우하는 교육부, 교육부를 통제하는 기재부, 기재부에 내재된 한국사회 시스템, 즉 자본의 의도에 점령당한 한국사회 시스템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각자도생의 경쟁에 시달리면서도 연구 공동체를 구성할 엄두는 못 내고, 학문 재생산 단절로 인접 학문 분야가 통째로 소멸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학문 생태계를 구축할 생각도 못한 다. 무엇보다 비정규교수의 고통이 한국사회 시민들의 고통과 하나의 축으로 이어져 있다는 조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전시하는 서글픈 부조리이기도 한 것이다.

신재호는 1925년 ‘남객의 신년만필’에서 당대 식민지 학자들이 대소강약을 숫자로만 비교하는 안목에 갇혀 필패의 결론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설령 패하고 망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음을 모르는 일치가 현실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말이다. 신재호는 필패의 결론을 피해 계산이 나오지 않는 혁명을 향해 갔다.

어쩌면 계량화와 수월성과 효율성으로 점철된 연구 계획서가 오늘날 비정규교수에게 필패의 결론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계획서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폐지하고 연구 공동체와 학술 생태계와 사회적 책무를 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지금으로선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연구재단 시스템은 비정규교수 자신을 위해서도, 학계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자, 만국의 비정규교수여….

NGO 칼럼



안천웅
(사)한국나눔연맹 중앙총재

겨울은 누구에게나 춥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유난히 더 길고 매섭다.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서비스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두툼한 외투 한 벌과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절실한 소외된 이웃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천사무료급식소’는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하루 한 끼의 식사조차 걱정해야 하는 독거 노인과 노숙인, 취약계층에게 이곳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장소를 넘어 따뜻한 한 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전하는 ‘사람의 온기’ 그 자체다.

우리 단체는 ‘나눔은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굳은 믿음 하나로 광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무료급식과 복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실 지난 2017년 광주에서 처음 급식소 문을 열었을 때는 막막함도 컸다. 정부의 지원 없이 오직 민간 후

‘천사급식소’에 따뜻한 한 끼의 희망을

원으로부터 운영하다 보니 지역에서 신뢰를 쌓고 도움의 손길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며 잠시 급식소의 문을 닫아야 했던 아픈 시간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문을 열어 달라”는 어르신들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 간절함에 힘입어 다시 급식소의 불을 밝히게 됐다. 다행히 재개소 이후 급식소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고, 지금은 하루 평균 450여명의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광주시 북구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이제는 하루 3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급식소 운영을 돕고 있다. 이들은 어르신들의 식사를 보조하면서 안전 역시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많은 시민도 후원자로 동참해 나눔의 온기를 보태주고 있다.

급식소의 하루는 아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식사는 오전 10시부터지만 그보다 일찍 도착해 웅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어르신들을 뵈 때면 항상 가슴이 뭉클해진다.

지난해 겨울부터는 추운데도 밖에서 줄을 서며 기다리시는 모습들이 격정대 2층 공간을 빌려 별도의 대기 공간도 마련했다. 그곳에서 함께 나누는 답소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는 위로이자 소중한 배신이 된다.

우리 급식소의 나눔은 식사 대접에만 머물지 않는다. 2023년부터 예술의전당 등 공연장에 어르신들을

초청해 효도·보훈 음악회를 여는 등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웠던 이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다문화가정 이웃들과는 여수와 경남 창원 등지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등 이웃 간 정을 나누는 프로그램도 이어가고 있다. 식사를 넘어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활동으로 지속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이어가는 일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급식소는 지금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 오직 시민들의 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운영비 등이 급등하면서 운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등 현실의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럴 때 시민들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식사 해결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축복한 겨울을 버텨낼 ‘용기’가 되고, 우리 사회에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작은 마음을 보태는 일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이 계절을 견디게 하는 큰 힘이 된다.

(사)한국나눔연맹은 앞으로도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것을 약속드린다. 거창한 변화가 아닌, 한 끼 식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작은 기적을 확산해 나가겠다.

올 겨울, 주변 이웃의 하루를 밝히는 ‘한 끼의 기적’에 여러분의 마음과 온기, 관심을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겨울을 이겨내는 가장 따뜻한 힘, ‘천사무료급식소’와 함께해주시라.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의 의미와 제언

은 성과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UNFCCC Climate Week)은 협약 당사국, 유엔 및 국제기구,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및 파리협정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행사다. 협약 사무국과 개최국이 공동 주관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개최하며, 6월에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와 11~12월에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논의의 장이다.

행사는 크게 당사국, 국제기구, 옵저버 기관 등이 참석하는 공식 회의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공식 회의는 파리협약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의 및 포럼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후재원, 탄소시장, 정의로운 전환 등의 의제별 세션이 진행된다.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유엔과 당사국의 야심찬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각 대륙 권역의 이슈를 당사국총회 공식 의제에 반영하며,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해 이행과제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기후주간에 198개 협약 당사국과 국제기구, NGO 등에서 1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각계 이해관계자까지 포함하면 참석자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

제 협력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기후주간과 연계해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국제주간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이번 기후주간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높이고 COP33 유치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아 걱정이다. 유엔이 개최 도시의 교통, 안전 및 보안, 회의 장소, 숙박 등 전반에 걸쳐서 매우 까다롭게 제시한 요건과 세부 타임라인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역할 분담, 공동 협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지자체, 유관기관, 기업,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학술·전시·체험·견학 등의 부대행사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유엔 기후주간과 녹색전환 국제주간이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이행의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선도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의 노력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끝으로 남도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물론이고 주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지역의 활력이 넘치게 하는 국제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社說

중앙부처 벽에 막혀 반쪽 우려 큰 행정통합법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설치 특별법안이 정부 부처의 벽에 가로 막혔다. 386개 특례 조문 가운데 119개에 대해 정부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냈는데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과 관련된 핵심 특례가 많아 이대로라면 ‘무늬만 통합’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례 10개 가운데 3개를 정부가 거부한 쟁점에 단순히 거부한 특례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 특례가 빠진 것이 문제다. 광주·전남 미래 성장산업인 AI와 에너지 분야 타격이 가장 크다. 100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을 특별시장에 부여하려 한 특례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국가 책임 및 재정 지원 특례가 대표적으로 법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미래 성장산업을 지역 뜻대로 하나도 할 수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 국고 보조금을 인상하고 조과 사업비 전액을 국비 지원하겠다는 특례에도 정부는 ‘기부대 양여 원칙 훼손’과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다. AI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AI 집적단지 지정 특례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중앙 정부의 총괄 관리 필요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거부한 특례 사례를 더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정부 부처의 불수용 이유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행정통합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거부 사유인 ‘중앙 정부의 총괄 관리 필요성’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반대 이유로 든다면 무엇 하러 특별법을 마련하려 하겠는가.

정부 부처의 기득권 지키기가 이정도라면 빠진 특례 조문이 문제가 아니라 연 5조씩 4년 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재정 지원 자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도 정치인 등 지역민들이 ‘허울뿐인 통합법’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지만 정부 관료들은 정부 TF에서 논의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20조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이를 특별법에 바로 담기는 쉽지 않다”고 답한 것을 보면 의구심이 안 들 수 없다.

중앙 부처 관료들의 기득권 지키기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권 초기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지역 균형발전이란 핵심 정책을 실현해야 할 마당에 관료들의 반발이러니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강력한 드라이브로 관료들의 기득권을 허물어야 온전한 행정통합이 시작될 것이다.

광주 미래항공 선도도시 성공을 위한 조건은

광주시가 핵심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과 미래차를 결합한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선도도시 조성을 추진한다고 한다. AAM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2033년까지 2350억원을 투입해 AI 집적단지와 자동차 산업 벨트의 제조 역량을 결합해 궁극적으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도시 광주의 역량이 AI 기술을 더해 지상교통을 하늘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미래 항공도시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성공할 경우 또 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직 이착륙 비행안전성 실증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 드론과 유인 항공기를 빛그린산단·첨단산단, 광주송정역·무안공항 등 4개 노선에서 운행하겠

다는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도 내놓았다.

계획만 보더라도 하늘을 나는 꿈이 광주에서 실현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국내 2위의 자동차 생산 도시와 AI 중심도시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광주시의 현 상황으로 볼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자동차 제조 역량을 활용해 AAM 분야에서도 부품 생산부터 AI 운항까지 미래항공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라 반길 일이다. 다만 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도시들이 출사표를 낸 만큼 올라운드 플레이어 전략보다 잘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틈새 전략이 더 중요하다. 부품 제조면 제조, 무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라면 AI 특화 전략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다.

無等鼓

‘내가 만나는 모든 이탈리아인을 열반게 하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한 때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었다. 미국인이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찍은 시리즈 영상에는 파스타를 기워로 자르거나 에스프레소에 생수를 붓는 모습 등이 담겼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영상을 보는 재미다. 식당 매니저에게 신고하거나 머리를 감싸 쥐는 종업원, 특히 피자에 케첩을 뿌리자 식당 매니저가 걸어와 케첩 병을 집어 던지는 장면 등은 조회 수가 많았다.

파인애플 토핑이 올라간 파인애플 피자, 이른바 ‘하와이안 피자’도 음식에 자부심이 강한 이탈리아에서 부정적 반응이 뚜렷하다. 파인애플 피자를 음식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첨가하는 ‘음식 모욕’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일을 쓰듯미지근하게 먹는 게 어디 있냐며 혐오하는 편이다. 이탈리아인을 반으로 갈라놓는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몇 년 전 인기를 끈 홍콩 누리꾼들의 ‘파인애플 피자 사진 챌린지’는 이 점을 노린 영상이다. 파리올림픽(2024년) 펜싱 플리데 결승에서 홍콩 대표가 세 차례

비디오 판독을 거쳐 이탈리아 대표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탈리아펜션영행이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자 홍콩 누리꾼들이 파인애플 피자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화제가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난 4일 이탈리아가 밀라노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한 100명의 위원들에게 던진 질문이 파인애플을 피자에 올려도 되는가’였다. 투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

시한 것인데 무거운 회의 분위기를 바꿨다고 한다. 결과는 어땠을까. 가권 5표를 뺀 유효 투표수 95표 중 ‘예’가 46표, ‘아니오’가 49표였다.

며칠 있으면 설이다. 가족들이 모이는 밥상에 온갖 애것거리가 올라갈데다. 민주·조국혁신당 함탕, 검찰 수사권 박탈, 법원 개혁과 윤석열·김건희 형량,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번갯불’ 행정통합에 특례·특례 논쟁 등 차고 넘칠거다. 밥상을 갈라놓는 질문 대신, 동그랑땡이나 육전이나, 떡국엔 고기를 넣을까 굴을 넣을까라는 질문으로 웃으며 한 해를 맞으시길. /김지을 사회부장 dok2000@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국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